

국힘, 상임위원장 선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로 복귀
국토교통위원회 후보 선거만 경선
“상임위 통해 정부·여당 견제할 것”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함으로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김희정(교육위원장)·송석준(외교통일위원장)·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이양수(정보위원장)·유의동(국토교통위원회) 후보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엔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으나, 임 의원이 사의를 표하고 김정재 의원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유동수(정부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이양수
정보위원장

위원장)·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원장)·송기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진성준(국방위원장)·김영진(행안위원장)·이재정(문체위원장)·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한병도(운영위원장)·이광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도 말고,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깨버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로 국민의힘에 숨통이 트이면서, 원내로 복귀해 강도 높은 대정부·대여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추진하고, 국토교통위원회 후보 선거만 경선을 치렀다. 경선 결과, 유의동 후보가 49표, 김정재 후보가 48표를 받으며 최

종 후보로 선출됐다. 원내 지도부는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으나, 4선인 유의동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경선이 치러졌다. 유의동 의원은 국토위원장 후보 선출 소감으로 의총장에서 “무엇보다도 치솟는 집값, 전·월세 가격, 그리고 약자와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주택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말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직 끝끝내 강탈했다”며 “통상 여당이 책임지고 맡았던 정보위와 외통위를 야당에 떠넘겼다. 그렇지만 7개 상임위도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제할 수 있고, 산중위에서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 출숙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허구적 실상을 파헤칠 수 있다”며 “외통위에서는 최근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7개 상임위는 2년 뒤 총선 승리와 국회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견제하고 싸우면서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변화를 준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호남 표심에 촉각

민주당 본경선 주목 포인트
권리당원 약 30%가 호남 집중
2순위 지지 확보도 중요한 변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동등한 1인1표제를 실시하면서 당심을 잡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선거 초반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당원의 30%가 있는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치열하다.

◆높아진 권리당원 ‘힘’에 ‘거친 말’로 지지층 결집 시도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는 알려진 바 같이 ‘명청대전’으로 불리는 계파 간 대립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친이재명(친명) 노선을 걷고, 대표 시절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고 평가받는 정청래 후보는 겉으로는 친이재명을 외치지만 친청(친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보다 계파전으로

치러지다 보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활용되고 있다.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은 정청래 후보가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불린 박찬대 후보를 꺾었던 경험도 초반부터 후보들이 거친 말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이유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별다른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수해 지역에 내려가 SNS에 간간히 메시지를 냈던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경험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은 외부 캠프도 차리지 않고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민석 후보는 출마선언당시 정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시절 행보를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표현했고 전당대회 선전지 개입설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외부세력이 전당대회에 개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당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 성향 강성 지지층은 정 후보와 친천지 연계 의혹을 띄우면서 정 후보 측과 친청계 최고위원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와 김 후보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본경선, 호남 표심 공략 중요해질 듯

본경선이 시작됨에 따라, 권리당원의 30%가 있는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본선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한번 더 결선투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위 투표를 남은 후보에게 가산하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2순위표 확보도 관건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없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 대표 시절의 성과를 소개했다.

정 후보는 호남 지지세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권추자인 김민석(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의 지지보다 당심이 더 중요하다”며 “지난해에도 호남 국회의원 상당수가 저를 돕지 않았지만 당원들이 선택했다. 이번에도 당심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우상호 강원지사를 만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여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이다. 제대로 된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여당을 만들어서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고 총선 준비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

/박태홍 기자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

수사 공백 보완책 집중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법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내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관 상임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

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했다”며 “이를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입장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수사 공백 방지책으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 절차,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 직접 수사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수사관 실명제, 책임제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수사 실명제와 책임제가(이와 관련한) 검토 방안”이라며 “죽조심사(逐條審査)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와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집중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syj@

이 대통령, 美·남미·독일 5개국 순방

AI 서밋서 ‘AI 선언’ 발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5개국 순방에 나선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서밋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후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순차적으로 만난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



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에서밋에는글로벌 박테크기업 CEO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국내의 AI 기업,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국내 기업과 박테크 기업과의 MOU 등 협약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

/서예진 기자